

## 대 법 원

### 제 3 부

### 판 결

사 건	2010다83434 보험금
원고, 피상고인	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
피고, 상고인	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부환
원 심 판 결	서울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나116330 판결
판 결 선 고	2012. 5. 9.

#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#### 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

사고로 인한 전완부 절단이 원고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,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증할 수 있고, 거기에 논리 및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.

## 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,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,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(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다19104 판결 참조).

원심은,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4. 9. 25.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, 이 사건과 같이 장애등급이 확정되어야만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장애판정기관인 의무조사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고,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애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, 원고는 전역명령과 함께 심신장애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장애등급 판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,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전역통지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2006. 6. 28.부터 진행되고,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제2급

장애담보 특별약관 제1조는 '의무조사위원회'가 판정한 원고의 심신장애등급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정한 제2급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는 '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(심신장애등급표) 및 별표2(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)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제2급 신체 장애등급으로 규정하고 있고, 한편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(전역등 기준)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자의 정도가 위 별표 1,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,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약관의 규정 및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퇴역하는 것을 전제로 군인들의 복리 및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, 군인사법(2006. 4. 28. 법률 제 7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7조, 제38조, 동법시행규칙(2007. 2. 1. 대통령령 제198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, 동법시행규칙(2007. 8. 9. 국방부령 제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, 제50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군인인 원고가 심신장애로 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설치된 '의무조사위원회'의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,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장애보험특별약관에서 '심신장애등급'의 판정을 '의무조사위원회'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,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장애보험특별약관에서 정한 의무조사위원회의 '심신장애등급 판정'이라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

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### 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민일영
---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박일환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신영철
--	-----	-----

	대법관	박보영
--	-----	-----